

국가가 책임지는 개별 맞춤형 지원, 그 첫 번째 발걸음



강 옥 려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기초학력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OECD는 학령기의 학력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 소득의 3%가 하락하며, 국내 총생산 역시 1.5%가 하락한다고 하였다(교육부, 2021). 그만큼 기초학력은 개인의 존엄을 지키며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이에 「기초학력 보장법」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던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도·지원이 대전환점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학력을 인권으로 접근하는 철학적 배경과 ‘부진’이라는 개인 내적 혹은 현상학적 측면의 용어에서 ‘지원 대상’이라는 용어로의 전환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 책임 이행 및 실질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학력의 책임이 교사→학교→교육청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실행이 매우 잘 드러나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크다.

우선, 지원 대상 학생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및 학업성취도를 강압적인 전수평가가 아닌 선택적 자율평가를 적용한 것은 여러 가치관이 혼재된 시대에 우려되는 문제점을 벗어나 희망하는 교육주체들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의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교육은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신뢰도가 낮았지만 컴퓨터 기반 적응형 검사로 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개별 학생을 영역별로 세세한 수준까지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기적인 향상도 점검을 하여 교수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다 과학적·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AI 기반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학생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국가 전체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 공교육에서의 빅데이터 기반 교육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며, 지원 대상 학생이 아니어도 기초학력 부진이 나타나는 시기, 과목, 영역 등을 찾아낼 수 있어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면서 지원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 지속적, 체계적으로 될 것이다. 한 예로, 각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분산 제공되어 있는 기초학력 진단 및 교수·학습자료를 통합하는 국가 포털이 구축되면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콘텐츠를 한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학생의 학습 이력이 데이터로 남게 되어 학년이 바뀔 때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학부모에게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와 지원 내용, 사후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학부모의 참여 동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어도 학부모의 미동의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진단체계와 함께 대상 학생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은 현장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 개발되고 교육과정 내에 문해력과 수리력이 강화되면 기초학력은 곧 미래사회의 기초 역량으로 재개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별 최소 성취기준이 정해지고 기초학력 진단 도구의 평가기준이 설정되면, 평가와 지원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고 시기별, 발달단계별 꼭 필요한 기초학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학생들의 속도에 맞게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 외에도 교육부가 정확한 진단을 통한 대상 학생 선정, 전문적 지원을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 학습지원 교육 기반 내실화에 대한 계획에 여러 기대 효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먼저, 정확한 진단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맞춤형 지원도 중요하다. 맞춤형 진단 시스템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결과와 자료를 제공하지만 결국 이 자료를 활용해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종합계획에는 교과 및 담임교사를 위한 연수와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사례 보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모든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 역량 개발과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들여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근무여건들도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맞물려 중요한 것이 모든 예비교사 양성기관에서의 다양한 수준, 다양한 능력, 다양한 문화적·경제적 수준의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양성이다. 현재는 학습지원교육 내용을 교직과목에 반영하고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와 연계하여 경험할 수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모호하다. 교육부 차원에서 각 예비교사 양성기관에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운영해야 하는지 명시 및 의무화하고, 교육실습과 교육봉사를 학점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진단 절차에서 ‘기초학력 진단-보정지도-향상도 진단-보정지도’ 식의 절차는 목표달성과 교수법 수정 여부 결정을 위해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 학생들은 같은 단원을 장기간 반복 지도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상도 진단은 각 교과, 각 단원별로 타당한 동형 평가 문항들이 제작되어 자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셋째, AI 기반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학생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둘 경우, 자기주도적으로 꾸준히 수행하는 것은 높은 학업성취의 학생들의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AI 기반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 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이를 매일 꾸준히 관리할 사람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전문적 지원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진단 및 지원의 역할이 강화될 예정이다. 진단이든 지원이든 이 센터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진단할 검사도구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성과를 빨리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급하게 갈 수 없지만 우리는 이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더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이들을 지도해야 하고,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교육적 시각과 관점의 변화가 진정한 시점이다. 학생이 어제보다 오늘, 어느 곳에서 나아지고 있는지 혹은

성장하고 있는지 가정, 학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고_강옥려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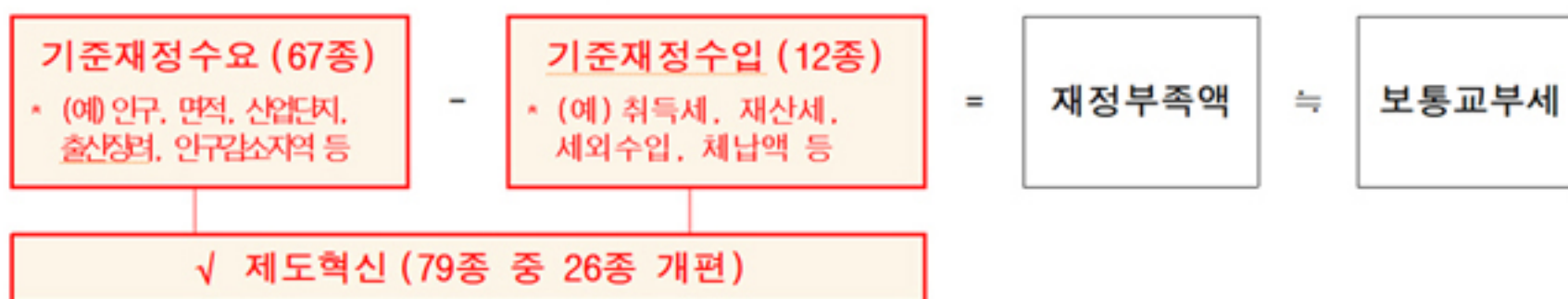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건전재정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

-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발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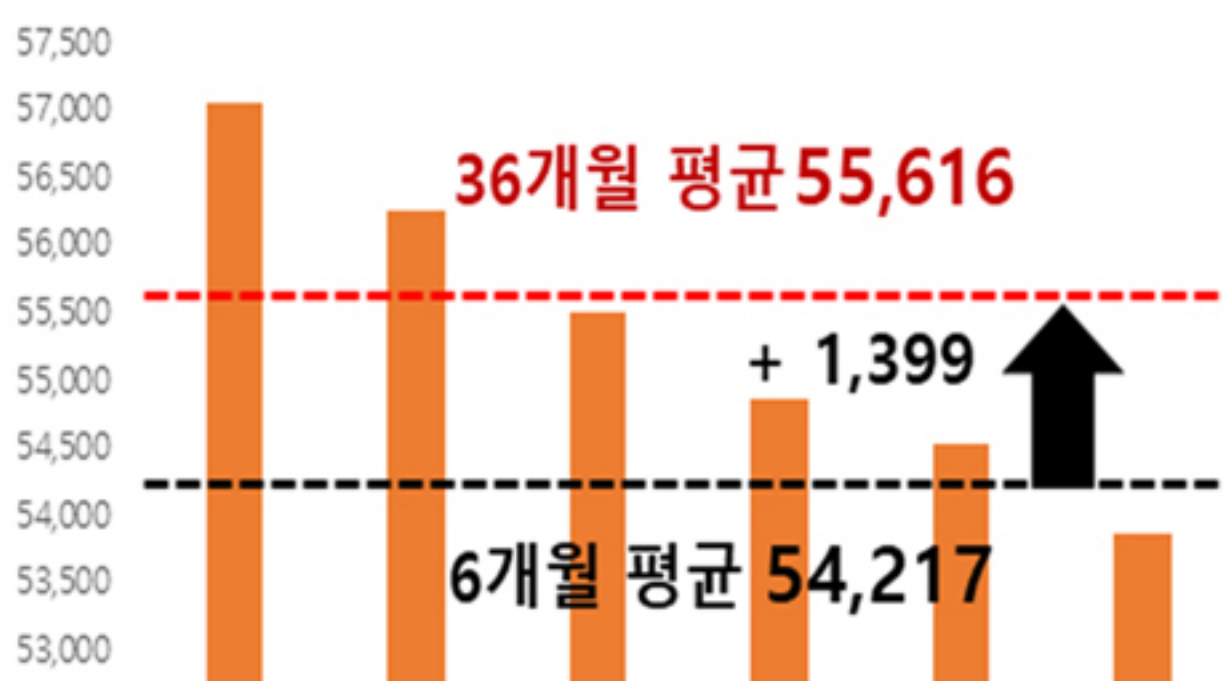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 (근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기능)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방향 등 심의·자문(구성) 총 21명 / 지방재정 전문가 등 민간위원 19인 및 정부위원 2인
-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되었다.
 -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등

•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 •



-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 1. 지역경제 활력제고
 -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하여 지원*한다
 - * 분야 : (현행)환경보호비→(개선)환경보호비+산업경제비대상 : (현행)산업단지+기업도시→(개선)산업단지+기업도시+혁신도시
 -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를 신설하였다.
- 2.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인구감소지역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단기인 6개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하여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재정 충격이 심화되었다.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 (㉠㉡시)주소이전 조건으로 30만원 지급, (△△군) 소속 공무원에 인구유치 목표 할당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인구감소 지역 A군 •





- 2023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을 약 67%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확정된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저출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를 대폭 지원한다.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반영률)을 50% 확대하여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보다 최대 225%p 반영률을 더 적용받는다.
 - * (○○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비용 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

• 현행 •

유형	합계출산율	반영률
1유형	0.92~1.12명	50%
2유형	1.12~1.32명	100%
3유형	1.32~1.52명	150%
4유형	1.52명 이상	200%

• 개선 •

유형	합계출산율	반영률
1유형	0.81~1.01명	75%
2유형	1.01~1.21명	150%
3유형	1.21~1.41명	225%
4유형	1.41명 이상	300%

3. 지방재정 건전화

-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페널티)을 부여한다.
 -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단체와 비교하여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특전(인센티브)을, 과다 지출할 경우 감액(페널티)을 부여한다.
 - 또한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페널티)한다.
-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기피(남비)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5개 지자체),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3개 지자체) 등

□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10월31일(월)부터 12월 1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와의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41개사가 새로 태어났어요!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 -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지원 대상에 혁신적 사업모형(모델)(BM)을 가진 41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추가 선정

□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시장개척자금, 특별보증, 정책자금 연계 등을 뒷받침하고 세계적(글로벌) 성장 묶음(패키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속적으로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토대를 만들고, 유망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대상 4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지원 대상은 연구개발 완료를 앞둔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해 향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 지원 대상 선정에는 전문심사단과 5:1의 경쟁을 통해 선정된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 '21년까지 선정돼 지원을 받은 100개사('20년 40개사, '21년 상반기 60개사 선정)는 선정 이후 평균 고용이 약 2배 성장*(91.4%↑) 했으며 매출 또한 2.5배**(149.6%↑) 급성장했다.
 - * 아기유니콘 고용 : (신청당시) 2,855명 → ('21년말) 5,465명(+2,610명, 91.4%↑)
 - ** '20년 선정 아기유니콘 매출 : (신청당시) 1,338억원 → ('21년말) 3,339억원(+2,001억원, 149.6%↑)
- 또한, 100개사 중 60개사가 총 6,767억원(기업당 113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 아기유니콘의 급성장을 반영하듯, 올해 하반기 공모에서는 경쟁률*이 역대 최대인 8.4:1까지 오를 정도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대표적인 육성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 * 사업 경쟁률: ('21년) 2.6:1, ('22년 상반기) 4.7:1
- 이번 선정기업 41개사의 평균 업력은 4.2년, 매출액은 30.3억원이고,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장(플랫폼) 18개사,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15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에서 모두 에이(A)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최고등급인 에이에이에이(AAA)를 받은 기업도 11개사로 확인됐다.
- 주목할 만한 우수 선정기업은 아래와 같다.
 - 알씨이는 중장비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운영 기업이다.
 - 연 7%로 성장 중인 베트남 중고 중장비 시장(시장 규모 3조 추정)이 주 타킷으로 베트남 진출 2년 만에 연간 4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 파이온코퍼레이션은 알릴 상품의 사진, 영상, 회사유알엘(URL) 등 자료만 제공하면 마케팅 영상 제작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 이 프로그램 덕분에 두바이 소재 작은 한인마트가 월 500개의 마케팅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 큐라움은 수면무호흡증 치료 의료기기 생산기업으로 의료계 박사출신이 창업했다.
 - 구강 삽입형 기기를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환자 담당 의료진에게 이동통신(모바일)로 전송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 포엔은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 시작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제조기업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재제조, 재사용, 잔존가치 평가 등을 한다.
 - 재제조 과정에서 확보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보험, 중고차 판매 등에도 활용하며 점점 사업모형(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기업들이 창업 초기 높은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자금(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등 총 12가지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 한편, 이영 장관은 “내년부터 아기유니콘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주해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상황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세계 우수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집중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녹색제품 사고 혜택받으세요. 2022 녹색소비주간 운영

- 녹색제품 사면 최대 30% 할인, 친환경 생활실천에 각종 포인트 제공 -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홍진)은 환경표지 30주년을 맞아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 장보기 등 녹색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 *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폐기를 발생을 줄인 제품을 뜻함
-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통사, 카드·은행사, 소비자단체 등 24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녹색소비 협의체(ESG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 후 △16개 유통사, △4개 카드사, △4개 은행사, △3개 시민단체, △전국의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37개 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다.
 - * 기후변화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에 동참하도록 정부-소비자단체-유통사-카드·은행사 등 24개 기관이 녹색소비 활성화를 논의·실천하는 협의체('22.12월~)

-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참여 기관 및 회사 여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녹색제품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 우체국쇼핑 등 3개사*의 온라인 녹색매장 전용관에서는 녹색제품을 최대 30% 할인해 제공하며 백화점 및 대형매장 내 녹색매장 등에서는 ‘녹색제품 기획전(할인 및 1+1)’ 등을 선보인다.
 - * 우체국쇼핑, 인터파크, 홈플러스
 - 아울러 장바구니 및 다회용기(텀블러 등) 사용, 포장 시 일회용품 안 받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고객에게는 참여사*의 회원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 * 갤러리아 백화점 5개 사업장(서울, 광고, 대전, 천안, 진주), 비씨카드
 - 이밖에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에서는 어린이집과 함께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줄임말)’를 운영하고, ‘우리동네 친환경 생활 상담단체(멘토단)’와 녹색소비 및 친환경 생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공지문을 참조하면 되며 할인품목, 포인트 지급 방법 등은 회사별로 다르므로 각 회사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 2022 녹색소비주간 참여 기관 및 회사 명단 •

구분	참여사 (가나다 순)
유통사(16)	네이버, 롯데쇼핑e커머스,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주)올가홀푸드, (주)이마트, (주)인터파크, (주)초록마을, 쿠팡(주),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주)한화갤러리아, 홈플러스, BGF리테일, GS리테일, LX하우시스
카드사(4)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은행사(4)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시민단체(3)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구매지원센터 (10)	경기안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제주, 충북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녹색제품 구매와 친환경 장보기와 같은 녹색생활의 실천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현명한 행동 중 하나”라고 말했다.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개념 재정립의 쟁점과 과제 : 제2주소 도입을 중심으로

김 지 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개념 재정립 필요성과 쟁점

주민의 개념에 대한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개념에 따르면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주소를 가진자'로 정의되며, 「주민등록법」 제 10조 제2항에 따라 1인1주소 원칙이 적용됨

행정환경변화와 주민개념 재정립 필요성

-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개념 재정립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관점에서 제기됨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되었으며 예를 들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이전, 5도2촌 라이프, 듀얼라이프 등 사실상 2개 이상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됨. 그러나 법적으로 2개의 주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생시키는 행정수요는 제2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반면, 납세의 의무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됨
- 다른 한편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소이전 없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단기체류인구 등을 주민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주민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전북연구원, 2020; 대구경북연구원, 2021)

주민개념 재정립에 관한 쟁점

- 위 주민개념 재정립에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정책적 논의에 관해 12명의 전문가 FGI 실시 결과, 제2주소의 허용을 통한 주민개념 재정립은 행정수요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하지만 과연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쟁점1) 주민 개념 재정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 또한 제2주소 제도 도입에 따라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 도입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차원에도 이견이 있음
 - (쟁점2) 제2주소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과 편익 간의 이익형량은 어떠한가?

02. 쟁점1 주민개념 재정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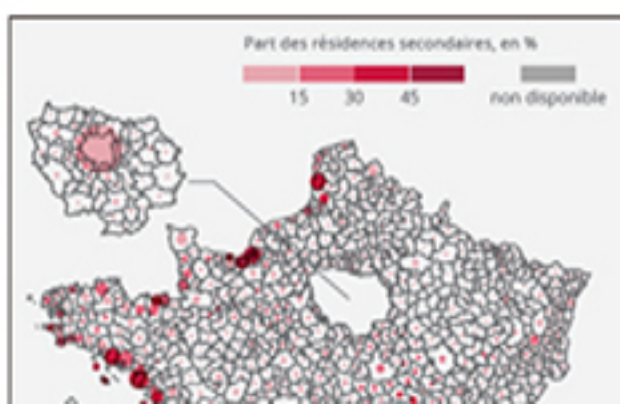
해외 제2주소 주민의 거주경향

- 영국의 경우 주소 등록제도가 없지만 센서스 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부주소를 두는 인구를 집계함
 - 인구 1,000명당 제2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대도시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부(East), 런던(London), 남동부(South East), 남서부(South West), 웨일즈(Wales)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제2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185명으로 런던을 제외한 도시 전체 평균31명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음(영국 통계청 자료)
- 프랑스의 경우 2019년 기준 제2주소는 총 1,976천개(개인소유 기준) 정도이며, 이 중 2/3은 60세 이상 가구 소유 이고 전체 60%는 해안가 등 휴양지에 위치하고 있음(프랑스 통계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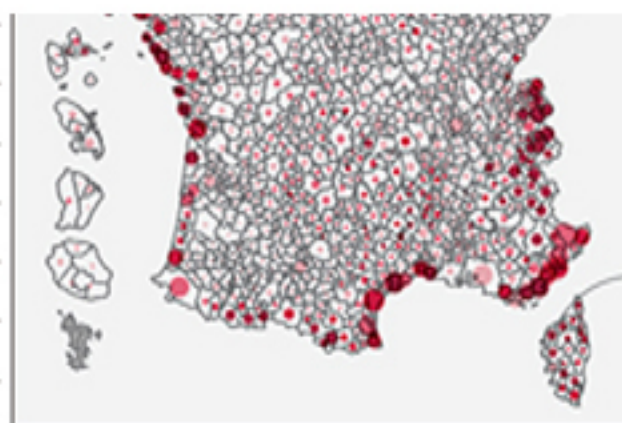
영국의 지역별 제2주소 현황

지역	해당지역 전체인구	거주민 중 이중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	해당지역인구 1,000명 당 이중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
NORTH EAST	2,596,866	26,731	10
NORTH WEST	7,052,177	85,346	12
YORKSHIRE AND THE HUMBER	5,283,733	72,753	14
EAST MIDLANDS	4,533,222	75,829	17

프랑스 지역별 제2주소 비율



WEST MIDLANDS	5,601,847	85,430	15
EAST*	5,846,965	122,683	21
LONDON*	8,173,941	166,605	20
SOUTH EAST	8,634,750	184,616	21
SOUTH WEST	5,288,935	130,055	25
WALES	3,063,456	60,965	20



03. 쟁점2 제2주소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과 편익 간 이익형량은 어떠한가

제2주소제도 도입의 비용·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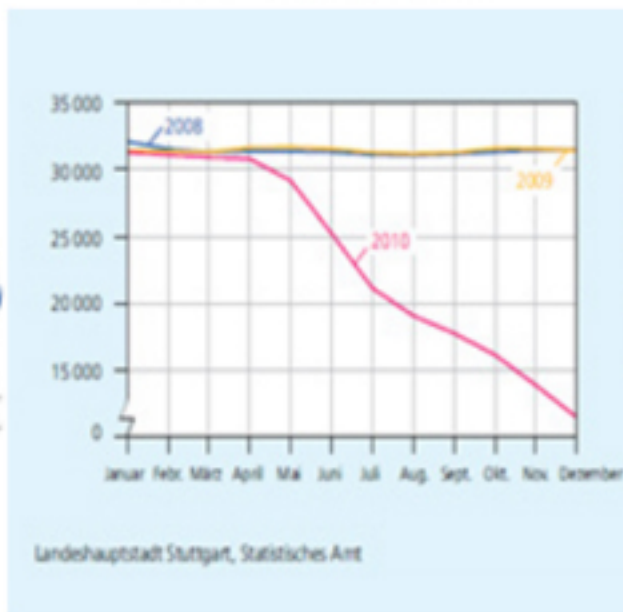
- 국내의 경우 관련 자료 부족으로 제2주소제도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대상집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최대 약 86만3천명(전국민의 약1.67%)로 예상됨
 - 활용에 예상되는 정책대상집단 규모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FGI 결과 제2주소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세 납부액, 주민수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인력 등에 대한 편익(B)과 제2주소 신고 및 확인 등을 위한 행정 처리와 제2주소 주민의 권리와 의무 범위에 대한 사회적 갈등 등의 비용(C)을 고려할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임
- 독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제2주소에 대한 2차거주지세(Zweitwohnsitzsteuer)를 조례로 채택할 수 있음. 독일의 경우 제2주소를 가지는 주민의 비율은 전체의 약 1.47%이며, 제2주소에 대한 세금부과시 해당지역의 제2주소 이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례가 발견됨(독일통계청, 2015; 슈투트가르트시 통계자료, 2011)

- 독일의 지역별 제2주소에 대한 세금징수여부 분포와 제2주소지세 도입 후 제2주소지와 주주소지 등록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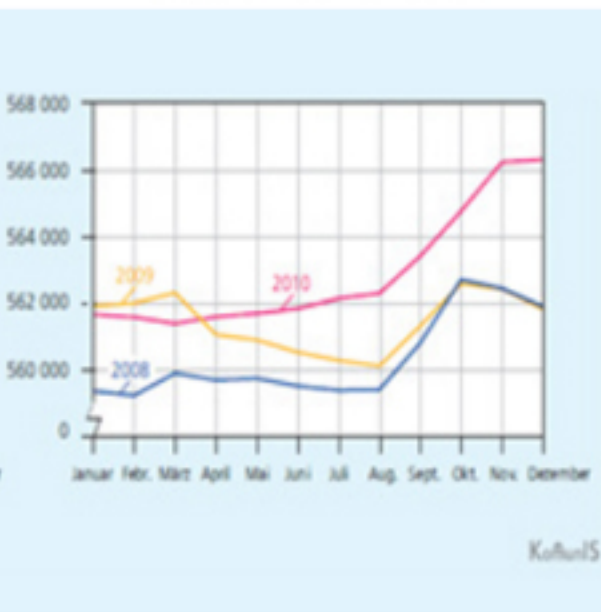
〈지역별 제2주소지 세금징수여부 분포〉



〈제2주소지 등록자수 변화〉



〈주주소지 등록자수 변화〉



04. 쟁점별 분석결과와 과제

쟁점별 분석 결과

- (쟁점1) 제2주소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 제2주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제2주소를 두는 주민이 생길지가 달라질 수 있음
- (쟁점2) 제2주소제도의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과 편익간의 형량은 어떠한가?
 - 제2주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제2주소제도 활용가능 인구에 대한 자료축적이 필요함
 - 특히 제2주소 주민에 대해 정부서비스의 수혜권을 부여하는데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선거권·참여권 등 주민으로서의 주요 권리를 어떤 수준까지 제공하고, 지방세납부 등 주민의 의미는 어떤 수준까지 부과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주민개념 재정립을 위한 향후의 과제

- 행정환경변화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주민개념의 재정립은 필요하지만, 제도도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통계자료의 축적,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_김지수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기간 2022.10.25.(화) ~ 11.17.(목)

대상 전국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보호자

프로그램 내용



장애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 제공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진로 선택 및
취업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
실시간 소통

그렇다면 어떤 멘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장애인 진로멘토단



정은혜 배우/작가 발달장애

-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니얼굴 출연
- 보람씨의 행복한 직장생활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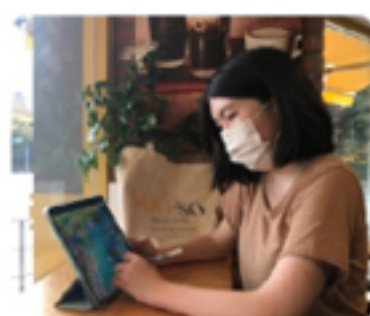
멘토링 일정 : 10.25.(화) 14:00



김승훈 바리스타 발달장애

- 행복키움(주) 사내 카페 바리스타

멘토링 일정 : 11.4.(금) 14:30



김희동 CEO 지체장애

- 시각디자이너
- '21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멘토링 일정 : 11.5.(토) 11:00

알기쉬운 정책용어



장애인 진로멘토단



이창훈 아나운서 시각장애

•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멘토링 일정 : 11.16.(수) 14:00



권순미 바리스타 청각장애

• 스타벅스 서울지역 점장

멘토링 일정 : 11.17.(목) 10:00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대니!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진로 멘토링 참여 방법

1



누리집 접속하기

mentoring.career.go.kr

2



회원가입하기

개인회원>일반으로 가입 *개인 메일 인증 필요

3



멘토별 일정 확인 및 사전 신청하기

참여신청 또는 참관신청

수업 당일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않고 신청해 주세요!

알기쉬운 정책용어

